

#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4791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21.

발 의 자 : 이성권 · 박정하 · 조승환  
우재준 · 주진우 · 박정훈  
이종욱 · 최은석 · 강승규  
고동진 · 강대식 · 김종양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사·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음. 또한, 현행법 시행령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
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정원, 국립공원 지정과 비교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하게 엄격하고 현실성 없는 지정요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실정임.

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 중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삭제하고, 부지 면적기준을 2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, 부지 면적 산정 시

국가로부터 점용·사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항).

##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도시공원 중”을 “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사·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제25조의2제1항 중 “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사·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”을 “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부지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부지 면적에는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나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의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를 포함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<br>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<br>1. 국가도시공원: 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<br><br>2. 3. (생략)<br>② (생략)   | 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<br>① -----<br>-----<br>-----.   |
| 제25조의2(국가도시공원의 지정·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)<br>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사·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| 1. -----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사·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-----<br>----<br>2. 3. (현행과 같음)<br>② (현행과 같음)   |
| 제25조의2(국가도시공원의 지정·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)<br>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, 자연경관 및 역사·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·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| 제25조의2(국가도시공원의 지정·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)<br>① -----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부지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의-----<br>-----<br>-----인 경우 부지 면적으로는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나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 |

|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② · ③ (생 략)</p> | <p><u>용허가 또는 국가도시공원으로<br/>의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를<br/>포함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-----------------|--|